

한눈에 보는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 금지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

-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인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금품 등 종류	상한액	비 고
경 조 사 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단, 화환·조화 10만 원)	축·조의금은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축·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됨
선 물	5만 원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됨
음 식 물	3만 원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 정당한 권원 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 공익신고





01 부패행위 신고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대상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①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②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③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④ 사인 또는 사기업 간의 부정·비리행위



0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대상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6개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 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폐수무단방류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해양수산부의 경우 5개 분야 34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기관

- | | |
|-----------|-------------------------------|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관할 행정·감독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
| ③ 수사기관 | ④ 공사 등 공공단체 |
| ⑤ 기업의 대표자 | ⑥ 국회의원 |



03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



-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04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해양수산부 : 044-200-5048~5049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www.clean.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해양수산부 www.mof.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모바일앱 신고

- 국민신문고앱(“부패·공익신고”)

방문·우편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우)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우)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해양수산부
- (우)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평일 09:00 ~ 18:00)

